

이 “기본소득...민주 ‘국민 목살’ 느낌”

“정부·시장 충돌 시 다 망해...부동산서 호전”

“꼭 이루고 싶은 건 ‘복지부동’ 공직사회 개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목살하는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미움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뭘 엄청나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저렇게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고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고용된 대리인이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시장, 세상을 더 잘되게 조성하는 것이 지배하고 마음대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쁜 인간하고는 같이 살아도 미운 인간하고는 못산다”고 노무

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발언을 소개한 뒤 “공감이 확 가지 않는다. 국민도 역시 하나의 집단지성체, 인격체고 대중도 감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 “정부와 시장은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면서 “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고 본다”며 “정부의 전문 관료 입장에서 이전보다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 하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와 다른 방식의 정책을 내면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방임주의자의 생각처럼 시장에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



이재명 혁신기업 정책간담회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술발전,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 소위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누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기본소득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

하자. 대응법 하는 데 100년 걸렸지 않았느냐”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 의장 “‘3선초과 제한’ 검토 과제”

“면책특권 신중하게 접근”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은 6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3선 연임초과 제한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했다.

그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볼만하다”면서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된 물음에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의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민의힘 박덕흠,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



회에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에 의장이 입장을 표하는 것은 자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국회는 그 눈높이에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과 결정, 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조직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연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이라면서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의 개혁 논의를 촉구해온 그는 “권력이란 기본적으로 지속성과 확대성이 있기에 제도로서 제약해야 한다”면서 선거 전후로 분출될 수 있는 국민 갈등을 막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은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를 바라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윤석열-이준석 정면 충돌...공천다툼 ‘서막’

윤, 권영세·이철규 임명 강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갈등이 사그라들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면에는 오는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권영세 사무총장·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인선을 단행했다. 사무총장단 인선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닌 협의 사항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일부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당무우선권을 가진 윤 후보가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대선후보는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우선권을 가진다.

권 총장과 이 부총장의 임명안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닌 협의 사항으로 돼 있다.

따라서 윤 후보의 이같은 당무우선권 발동은 당헌당규상 명시된 권리 행사로도 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갈등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응원에 두팔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지난달 3일 ‘울산 담판’을 통해 “당무우선권은 후보의 선거에 있어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 대

표에게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신사협정’을 한 바 있다.

윤 후보로서는 포스트 대선 국민의

당내 지형까지 고려해 공천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 대표로서도 공천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이날 사무총장단 인선을 두고 충돌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인사, 재정 등 당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선으로 꼽힌다.

윤 후보는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부부장이 사무총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전략기획부총장에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선임했다. 이 대표는 “윤핵관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냐”의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윤 후보는 인선을 그대로 완료했다.

사무총장단 인선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닌 협의의 사항인 만큼 윤 후보의 당무우선권이 우선된 셈이다.

그렇다고 이 대표가 공천권을 호락호락 넘겨줄 태세는 아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인 만큼, 윤 후보가 ‘러닝메이트’ 격으로 직접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그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다자대결서 이재명 36%·윤석열 28%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2주째 오차 범위 밖 우위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다만 이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격차도 약간 줄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 새 두 배로 뛰어올랐다.

안 후보는 호감도와 도덕성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엠베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차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6%, 윤 후보는 28%의 지지율을 각각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윤 후보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격차는 11%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줄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2%로, 전주(6%)보다 두 배로 상승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를 기록했다. 지지 후보가 없다가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는 20%로 집계됐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

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가 이 후보를 뽑았다. 윤 후보는 26%에 그쳤다.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처음 조사 대상에 오른 안 후보가 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 후보가 41%, 심 후보가 34%, 윤 후보가 32%였다.

이 후보의 호감도는 3%포인트 오른 반면 윤 후보의 호감도는 7%포인트 하락했다.

비호감도는 윤 후보가 65%로 가장 높았고 심 후보 62%, 이 후보 56%, 안 후보 54% 순이었다.

대선후보 중 도덕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르라는 질문에서도 안 후보는 35%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한 달 전 같은 조사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이다.

심 후보가 17%, 윤 후보가 14%, 이 후보가 13%로 뒤를 이었다.

도덕성 평가에서도 윤 후보는 7%포인트 하락했다. 이 후보는 3%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7.9%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광고국 062) 720-1016, 1017
팩스 062) 720-1020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문 상담

호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이를 간질여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NAVER 드림꽃도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